



【검토보고서】

2015. 9. 21(월)
제 261 회 임시회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개 조례안



양주시의회
YANGJU CITY COUNCIL

【전문위원 전태언】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과

- 제안자 : 양주시장(총 무 과)
- 제출일 : 2015년 9월 7일
- 검토일 : 2015년 9월 9일

2. 제안이유

- 중앙부처로부터 개선하여야 할 규제로 선정된 자치법규(조례)중 명백한 규제에 해당하는 조례를 모아 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조기에 근절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규제 개선사례 100선 선정규제(법제처)
 -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 양주시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토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규정
 - 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중앙부처 선정 규제
 -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행정자치부)
 - 양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문화체육관광부)
 -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문화체육관광부)
 - 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국토교통부)

4. 검토의견

가. 법령검토

- 제안된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는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로 부터 개선하여야할 규제가 포함된 조례로 선정(통보)된 조례로
-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는 조례는 당연히 개정하여야할 것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나. 정책 및 내용검토

- ①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¹⁾에서 “시민단체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양주시 조례에서는 시민단체를 위원 추천대상에서 배제함에 따라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규제 100선에 포함된 조례로 안 제2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시민단체도 공직자윤리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②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자원 봉사단체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위임한 근거가 없음에도 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선대상 조례로 선정되었으며 관련 조항인 현행 제19조은 삭제하였으며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 정비, 띄어쓰기 등 단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

1)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²⁾에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는 관련 민간 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양주시 조례에는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규제 100선에 포함된 조례로 안 제13조에 관련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13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2조 제6호에서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³⁾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능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심의기능을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였음.

그 외에는 재정운영위원회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조항의 정비, 띄어쓰기 등 단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

- ④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2조⁴⁾에서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현행 제10조 제2항과 제30조에서 불필요하게 감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과 제28조 제1항에서 시장이 법령의 근거없이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규제 100선에 포함되어 각각 삭제하였으며

2)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9조(회계의 구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6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이사의 수를 양주시 국장 2명과 관련 전문가 2명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총괄 담당하는 국장 1인(비상임이사)으로 축소하였음.

⑤ 양주시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 문화원진흥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⁵⁾ 제5호와 제6호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지방문화원이 수행하여야할 지역문화사업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양주시에서는 해당사업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에 따라 안 제7조 제6호와 제9호에 해당사업을 보조대상 사업으로 명시하였음.

⑥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⁶⁾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치단체는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양주시의 일부 수수료(기타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신고)는 허용범위를 초과하고 있어 규제에 해당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수수료로 조정하고 그 외에 법령 개정등으로 변경된 수수료와 새로이 정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수수료 수준으로 신설하였음.

5)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⑦ 양주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2 등에서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록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불합리하여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규제 100선에 포함되어 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선하였으며

안 제2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였음.

- ⑧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도 생업지원 대상으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시 우선 허가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음에도 우선 허가대상자에서 배제한 것은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규제 100선에 포함되어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허가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시켰음.

- ⑨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⁷⁾에서는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규제 100선에 포함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선 권고되어 안 제4조에 반영하였으며 그 외에 사항은 상위법의 개정과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였으며

- 일괄 제안설명한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7)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 형식검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음.

라. 절차검토

-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음.